

IIRI Online Series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김성한(고려대), 박기순(성균관대)

왕윤종(동덕여대), 연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2. 28

2022 일민외교안보포럼(IFIAS)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 일시: 2022년 2월 17-22일
- 형식: 서면 대담
- 참석자



김성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박기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왕윤중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 김성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기순

미·중 전략경쟁 하의 공급망 분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혼란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분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배터리, 의료부문, 희토류 등 4가지 핵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반도체와 배터리에 있어서는 미국의 적극적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미국은 자국 내 삼성전자,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대만의 TSMC 등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일단 첨단산업 공급망 분리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양 부문에서 모두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로 인해 한국이 미국에 유의미한 카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4가지 핵심 부문 이외에서의 전 산업의 공급망 분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월마트에 공급되는 물량의 40~50%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11% 정도로 낮아진 상황 하에서 전면적으로 중국과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분리가 추진될 경우,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약 28%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왕윤종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다자주의의 약화를 초래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구조,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초기에는 티포탯(tit-for-tat)이라는 맞대응 전략으로 미·중 쌍방이 관세전쟁을 벌였습니다. 학자들은 미·중 관세전쟁의 효과에 대해 주로 무역전환(trade diversion)에 초점을 맞추었고, 양국 중 어느 일방이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쌍방 모두 패자(loser)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공급망 자체의 와해나 붕괴 가능성보다는 대미 수출선이 중국에서 타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논의되었던 것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넘어 기술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양상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통신장비의 대표기업인 화웨이와 같은 특정 기업을 겨냥하기 시작했는데, 전략적 기술 보호 및 첨단제품의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의 급소를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중 양국 간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가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핵심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부분적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entity list)이 되는 중국기업의 수가 늘어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현재까지 대략 260개 정도의 중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미·중 간 교역이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중 전략경쟁이 미·중 양국 교역에 미친 영향은 관세인상에 따른 영향과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위축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연원호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촉발된 자국중심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더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에는 미국이 백신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핵심 물품의 국제 분업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위기 시 자국우선주의가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시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라는 시장 원리가 깨질 가능성이 있고, 안보라는 국가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위기 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략적 목적에 의해 공급망을 활용한 경제적 공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공급망 상 신뢰할 수 없는 플레이어의 등장 때문입니다. 최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강조는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인식, 그 중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상의 의존도와 그에 따른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 그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주요 산업의 공급망 상황을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면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단적으로 시사합니다. 1990년대 이후 오랜 시간 시장의 논리에 의해 분업화되었던 기존

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는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핵심 품목의 생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 혹은 육성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편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 경제안보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 김성한: 일본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경제안보’ 문제로 규정, 경제안보상 직책을 신설하고 경제안보법(‘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일본의 대응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연원호

작년 9월 키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전(前) 국가안보국(NSS) 국장은 일본의 문예춘추(文藝春秋)와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지금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고, 안보 논의가 최근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키타무라 전 국장은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중요 기술을 ‘특정’한 후, 그것을 ‘육성’, ‘보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일본의 경제안보법 추진을 주도했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중의원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마리 의원은 경제안보의 요체가 ‘전략적 자율성(自律性)’과 ‘전략적 불가결성(不可欠性)’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일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국민 생활과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산업 구조 속에서 일본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한 분야를 확대하는 것, 즉 자국의 급소(choke-point)를 극복하고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안보 개념은 ‘경제의 안정과 자원 확보(security for the economy)’에서 ‘경제를 사용한 안보(security by the economy)’까지 그 패러다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기순

미·중 간 마찰이 무역전쟁에서 기술패권 전쟁으로 넘어가면서 기술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미·중 간에 기술이전이 중단되고 있으나, 이

제는 서방국가 간에도 기술보호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초 독일 정부가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의 독일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실트로닉의 인수 합병(M&A)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독일기업 인수를 의도적으로 막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술의 해외 이전을 막고 자국의 기술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발 빠르게 경제안보 분야를 총괄할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을 신설해 첨단기술과 희귀자원을 경제안보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안보상 설립 목적은 전략물자 확보, 기술유출 방지, 튼튼한 공급망 구축 등입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중국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2019년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국 배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에 밀려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반도체 몰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우리에게 비해 아직 우위에 있는 부문은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부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부·장 산업의 발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왕윤종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비용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0~40%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공장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만의 TSMC와 소니가 구마모토현에 짓기로 한 공장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고, 반도체 공장 설비투자의 50%까지 일본 정부가 지원하여 일본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직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에 필요한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산업정책의 기조(핵심 방향)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동 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특정 품목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이 이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면 정부가 심의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 법은 공급망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에너지 등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 첨단기술 분야의 민관 연구개발 등 기술협력, 특허 출원의 비공개화 등 포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이고, 반도체 협력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TSMC도 구마모토현에 투자금액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TSMC의 입장에서든 안정적으로 일본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일본 고객을 TSMC에 그만큼 뺏기게 되겠지요. 한편 TSMC로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각종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에서도 일본기업과의 협력에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제안보의 위협 및 기회요인

■ **김성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한국이 고려해야 할 경제안보 분야의 위협과 기회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 **왕윤종**

문재인 정부도 작년 요소수 사태를 경험하면서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전 대비가 중요한데, 항상 늦게 깨닫는 것이 아쉽습니다. 정부는 특정 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작년 말에 발표했고, 기선정된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20대 우선관리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 장기공급선 확보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소·부·장 분야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공급망 안정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소·부·장 관련 첨단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용제품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범용제품은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산은 가능하지만, 생산비용이 너무 비싸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현 상황에서 일본과의 신뢰를 구축하면 일본으로부터의 공급망 리스크는 충분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신뢰를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가격경쟁력 때문에 중국산을 수입해야 한다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아직 경쟁력이 약하지만, 중국을 대신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

다. 한국은 이러한 종합적인 구상을 인·태전략의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과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이외에도 앞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그리고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자가 되려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육성도 시급하고, 민간에서의 창의적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은 디지털 통상과 교역에 있어서는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는 디지털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실제로 디지털 교역을 위한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이 중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새로운 통상 분야의 핵심인 디지털 통상 부분에서 중국은 파트너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 연원호

단기적으로 공급망 재편은 우리의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들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지만,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의 경우,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활용하고 첨단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등으로 변화하는 미래 수요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한국이 직면할 경제안보 분야의 리스크는 크게 ▲ 산업정책 경쟁 심화와 ▲ 가치 중심의 경제 블록화로 요약·전망됩니다. 먼저 미·중 간 대립의 근본 원인이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국가 간 산업정책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주요국이 수출통제 및 투자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의 혁신역량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해결책으로 첨단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서구는 이에 위협감을 느끼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8

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반도체산업지원법안(European Chips Act)을 발표하며 “우리도 ‘경쟁’에 참여할 때다(It is time we join the race)”라고 표현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산업정책의 무한경쟁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중장기적으로 도전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둘째는, 가치 중심의 경제 블록화입니다. 최근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 인권 및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전략적으로 가치 중심의 연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급망 재편 및 협력은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US-EU 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등에서 핵심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미국은 올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공급망 재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핵심도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즉 동맹 기반의 공급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한국 역시 향후 더욱 강한 연대를 요청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기회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갈등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2022)」,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동시 접근을 목표로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박기순

먼저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는 우리의 기술적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원활치 않을 경우, 우리의 산업발전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반도체의 경우 우리가 디램(DRAM)(75%), 낸드플래시(45%) 등 메모리 부문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인 설계나 장비 부문에서는 미국, 일본, EU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원천기술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 등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회요인으로는 미·중 간의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지연에 따른 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조업이 강한 국가를 꼽으라면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급속히 올라섰으며, 이제는 첨단제품에서도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가장 큰 기술 경쟁국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없었더라면, 막대한 시장을 지닌 중국의 엄청난 기술추격으로 우리의 시장은 빠른 속도로 소실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추격을 늦추어 한·중 간의 기술격차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시장이 작은 국가는 세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지속, 확대하는 기회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 **김성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들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인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왕윤종**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규제했을 때,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도 예외 없이 동참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수출통제 목록(entity list)을 통해 표적 제재를 시행하면 한국이 이를 우회하기란 쉽지 않고, 선불리 우회하려다 적발되면 소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대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제재하는 분야는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장비가 중국에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SK 하이닉스의 우시디램(DRAM) 공장에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중국 정부의 조치가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이려면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다시 말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중국이 조변석개(朝變夕改)로 정책이 바뀌고, 수출통제와 보복 조치를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자행한다면, 외국기업은 아무리 상품을 팔아야 한다지만, 투자를 늘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 단정적으로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희토류나 범용제품 등에 대해 수출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분명히 하책(下策)이지요. 해서는 안 되는 조치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수출통제를 무분별하게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인·태전략의 차원에서 인·태전략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연원호

미·중이 대립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미·중 양국의 제재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 산업,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정부는 최대한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의 산업역량을 제고하며 관련 능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 대응의 초점은 당장의 타격에 대한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공격적 투자 및 지원, 핵심기술 및 인력의 유출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만의 글로벌 공급망 상 불가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토대로 미국의 과도한 대중제재를 막도록 설득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을 사전에 저지하는 전략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은 우리만의 경제를 활용한 안보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 박기순

한국은 전통적으로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 무역수지 흑자의 53%가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니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한·중 간 무역 동향을 자세히 보면 우리 수출 비중의 약 95%를 중국의 중간재와 자본재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시장이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비재 수출은 전체 대중수출액의 5%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중국과의 교역도 순조롭게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안보에 기술이 포함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술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중국 등 공산

권 국가는 물론 같은 서방국가 간에도 기술이전이 예전보다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미국과의 기술동맹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기술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시장도 기술이 있어야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5)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비 마련

■ **김성한:** 한국은 2017년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고려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연원호**

일단 5년 전과 달리 중국의 통상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더욱 깊어졌고, 교역 품목도 중간재-중간재 교역 중심으로 변화한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한·중 간 경제구조 상 일방적인 경제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가 간 상호의존이 비대칭적이라면 과(過)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경제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만약 상호의존이 대칭적이라면, 일방의 경제보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도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2022년 현재 한·중 간의 경제의존도는 상당히 대칭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6~2017년과 달리 미·중 간 경쟁구도도 첨예화되었습니다. 5년 전 사드 사태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을 당시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동맹과 가치 중심의 연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근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을 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공급망 재편에서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TSMC를 보유한 대만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최근 미국의 모습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 박기순

한국은 2000년 6월 마늘 파동의 쓰라린 경험이 있어 2017년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거의 무방비로 보복을 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늘 파동 때나 사드 보복 때나 한국은 단독으로 중국에 대응한다는 구도 하에 있었는데, 경제 규모의 차이로 보나, 경제 의존도로 보나,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나 동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태세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드 보복 당시 개별기업의 문제를 사드 보복으로 전가하는 상황과 같이 귀중한 내부전략 수정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당시, 우리 기업들은 중국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상승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쟁력 하락, 중국 내 판매환경의 악화 등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경영, 판매 전략을 다시 검토해 보고 수정해야 할 시기에 중국 내 판매 부진의 원인을 모두 사드 보복 문제로 돌리고, 그것이 본사에 잘 통하는 바람에 면밀한 중국 시장 전략 검토 없이 수년을 허송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의 외부적인 환경 변화와 함께 내부적인 문제점도 실기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 왕윤종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은 통상적인 법률에 근거하기보다는 하위의 행정 조치로 취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류에 대한 통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영화는 중국 국가영화국의 상영 허가가 필요한데, 한국 영화는 통상 1년에 2~3편 상영되다가 한한령으로 단 한 편도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들어서야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오! 문희’ 영화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의 경우, 출시하려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출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한령 이후 단 한 개의 신규 판호도 허용되지 않다가 2021년 6월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외국 게임업체가 판호를 받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한국 게임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시큰둥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관광도 문제입니다. 1

년에 8백만 명 이상 오던 중국 관광객이 사드 사태 이후 현재 코로나 시기까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단체관광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여행사가 한국으로 가는 단체관광을 모집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반면 개별 여행은 허용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묘하게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도 중국 정부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에 우리 정부도 대응 동력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인·태전략과 같이 공동 대응이 가능한 협력국이 있다면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하면 WTO가 아무리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제소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에 우리가 맞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 중국도 다른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6) 경제안보 제고 방안

■ 김성한: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경제안보 제고 방안(제도적 개편 등을 비롯하여)은 무엇인지요?

■ 박기순

경제안보는 이미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각국 정부가 중시하는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더불어 국가경제위원회(NEC: National Economic Council)가 함께 경제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NEC는 경제안보가 외교안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미 199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NEC 위원장은 재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제안보상과 경제안보실 신설 및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주도 핵심기술 청사진과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핵심기술정책조정국(CTPCO: Critical Technologies Policy Coordination Office)을 총리실에 신설하였으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SCRI: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 부처 또는 개별기업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경제안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조직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전쟁과 그에 따른 환경 변화가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정책을 조율, 결정할 수 있는 경제안보 부서를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 왕윤종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는 인·태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태전략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늦은 감은 있지만 공급망 관련해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기재부 1차관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기획단 역시 위상이 TF팀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범부처 협조와 조율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수출통제, 공급망 관리, 외국인 투자 심사(기술유출 방지), 리쇼어링, 디지털 통상안보, 사이버안보 등 경제안보를 총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경제안보 문제를 주요 분야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 연원호

경제안보가 경제적 손익계산을 넘어 국가안보 및 국가전략적 판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경제안보는 산업안보, 무역안보, 기술안보, 식량안보, 자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컨트롤 타워 구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우리의 역량을 제고하며 힘을 비축할 때입니다. 그 첫 발은 우리 경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기술을 파악, 육성, 보호,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술보호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과 투자유치를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를 조속히 갖춰야 합니다. 교역 상대국과의 기술 및 지식 중심의 연대를 위해서 상호 보조를 맞춘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심사 제도를 갖추고 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미·중 갈등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명확한 통상·외교 원칙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을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중국과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의 원칙과 제도를 정립하고 원칙과 법에 근거한 대응을 통해 미·중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견지 중인 유럽 국가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미·중 양측의 압박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끝/

